

긴급점검/서남해안권 발전구상

③ 시급한 통합 플랜

“우리당, 청와대에 끌려만 다녀

집권당 강해야 생산적 정치 가능”

J프로젝트·기업도시와 동반해야 성과

청와대의 서남해안권 발전구상(일명 무안·목포성장계획)에 대한 지역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가 엇갈린다. 우선 청와대가 직접 나서 무안·목포권을 개발해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 자체는 반기고 있다.

그러나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이 무안에서 목표를 거쳐 영암·해남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까지 이어지는 기존의 S프로젝트에서 J프로젝트를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우여곡절 끝에 J프로젝트를 끌고갈 특수목적법인(SPC)이 연말까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무안·목포 성장계획을 따로 추진하는 데서 올 수 있는 ‘전력분산’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라는 주문이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선임 연구원은 양대 프로젝트의 통합 추진은 지역주민의 여론일뿐만 아니라, 사업중복을 피하

골프장·관광시설 등 중복과잉 투자 우려  
서남권 개발 아우를 통합 프로젝트 필요

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조 선임 연구원은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J프로젝트와 무안 기업도시, 무안·목포성장계획까지 한 데 아우르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조 선임 연구원은 “J프로젝트와 무안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이미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시설의 중복과잉 투자 문제가 불거졌다. 이 와중에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신외항 등 지역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서남해안권 구상이 그대로 전개된다면 3자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당초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해 광

역권을 개발한다는 본래의 S프로젝트가 주축해지자 비슷비슷한 사업 내용을 토대로 포장만 달리한 채 새로운 계획을 세워본들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J프로젝트 선도론”도 제시됐다. 주택도시연구원 김미은 연구원은 아직 결음마 단계인 J프로젝트의 특징적인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진척시킨다면 그 효과가 서남해안권 전체에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J프로젝트의 경우 ‘기업도시 특별법’이라는 법적 기반과 의지는 확보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추진체계(SPC) 구성도 안돼 있다. 더욱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간척지 양수 양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프로젝트가 병행된다면 오히려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J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해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둬으로써 인접지역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는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J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서남해안권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면 J프로젝트와 무안기업도시를 동반 추진, 효과를 극대화해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J프로젝트가 이미 추진단계에 들어갔지만 이제라도 서남권 전체 개발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프로젝트를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따로 따로 가다가는 무엇보다 제대로 완성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끝>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천정배의원 전남대 강연



한 뒤 “청와대 및 정부와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 하되 때에 따라서는 견제와 비판도 사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21일 “정당이 강해야 생산적 정치가 이뤄지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대 ‘21세기 융통포럼’ 초청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을 지배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당정분리를 선언했으나 이것이 권위주의 청산을 넘어서서 당·청간 협력의 부재에까지 이르렀다”며 “우리당은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녀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당 주도로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최근 당내 정계개편론과 맞물려 노 대통령과의 본격적인 각세우기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천 의원은 이날 특히 “집권당이 강한 시민사회적 기반을 갖지 못할 때 민주주의의 작동이 어렵고 정부는 대통령 개인에 매달리는 구조를 갖게 된다”며 “강한 여당론”을 역설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신의 섭리로 탄생한 인물처럼 추앙되다가도 내일은 마치 무너져 버린 신상처럼 저주를 받는다”는 한 정치학자의 풍자를 인용

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나아가 “정당이 발전하지 않으면 관료들과 보수적인 당론에 이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열린우리당은 정책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이를 행정관리가 차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부동산대책과 관련, “11·15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도입하고, ‘버블세븐’과 같은 특정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제한하는 고강도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대해 “출총제나 지주회사 제도 등 소유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아 재벌들이 여타 경제주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효과 없는 공로연수제 예산만 낭비”

전남 “백화점식 관광정책 재정비 급하다”

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1일 2006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5일제)를 갖고 공로연수제도와 백화점식 관광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민주·북구 4)은 “전북발전위원회의 경우 연구용역을 적용·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기 의원(민주·북구 1)은 “광주시의 현행 공로연수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매년 13억여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사회위 이명자 의원(우리·비례)은 “광주 학생들이 눈술에 대비하기 위해 평균 50만원을 웃도는 돈을 지불하고 소수정예반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 다니거나 학교의 복인 하에 서울의 명문 학원으로 원정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교육 차원에서 눈술을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산업건설위 이상동 의원(민주·북구 3)은 “1억원 가까운 돈을 들인 용역에서 디자인센터 연차별 시행사업구체화 및 소요장비 구축안 수립, 센터 자립화를 위한 운영 방안 등을 제시받았지만 현실과 하나도 맞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500억원이나 들어간 디자인센터 건립은 성공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감사도 손재홍·김월출·김남일·조광향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시장의 사과가 없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파행 운영됐다.

◇전남도의회=국영애 의원(우리·비례)은 경제문화관광위 감사에서 “J프로젝트와 S프로젝트, 섬개발사업, 남해안 관광벨트 등 도가 추진중인 관광정책들이 백화점 나열식인데다 정확한 통계조차 뒷받침되지 않고 숙박시설과 먹을거리, 살거리, 정보제공 등이 전반적으로 빈약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기존 자원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정책을 주문했다.

국 의원은 “전남도 관광객 이동방문 통계 및 관광객 집계는 경우 올해 1·4분기 방문객 수 1천238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돼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투자실적도 남해안 관광벨트와 생태·녹색 관광개발 등 181개소에 민간자본 5조9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올해까지 9천 149억원(15%)에 불과했다.

올 해 처음 개최된 ‘섬·갯벌 올림픽 축제’는 3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참가자는 4천603명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국 의원은 지적했다.

건설소방위 감사에서 김창남 의원(민주·장흥 1)과 최중선(민주·여수 4) 의원은 83억원의 도비를 투자하는 ‘영산강변 어울마당 공원조성사업’을 도민의 여론수렴 절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노동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미국산 수입쇠고기 전량 구매 및 폐기’를 위해 21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우병 수입소’ 퍼포먼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범국민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민노당은 다음달 8일까지 전국적으로 1억원을 모금해 수입된 9만 전량을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분배’ 말 뿐 되레 신자유주의 추종

양극화의 늪으로 온나라 몰아넣어

김태홍의원 ‘참여정부 진단’



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절망적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21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한 ‘참여정부 45개월 진단’이라는 자료집을 발간,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발간사에서 “가장 개혁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참여정부가 출범 직후 단기적 경제실적에 지나치게 집착,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심화시켜 되돌릴 수 없는 양극화의 늪으로 나라를 몰아 넣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국민의 분노는 너무나 크고 인내심은 임계점에 달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한미 FTA는 ‘외부적 충격요법’을 통해 ‘내적 변화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 남북 간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을 실패로 몰고 간 이들이 아직도 버젓이 정부와 우리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계개편과 관련, 김 의원은 “새로운 정당의 목표와 정책과제는 구호가 아닌 중산층과 서민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쾌적한 대기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2006년 7월15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주세요. 대상자동차: 2005년 7월15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주세요. 원력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가까운 지정 자동차검사정비공점으로 오시면 철저한 정비, 신속한WS, 정밀·정기검사까지 책임지겠습니다.